

3·1절 도심 곳곳 빗줄기속 집회 '마무리'

'행정법원 조건부 허용' 보수단체, 기자회견

도심 소규모 기자회견·집회...차량행진 열려

비 내리면서 참가자-경찰 충돌 없이 마무리

3·1절인 월요일 비가 내리는 가운데 서울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열렸다. 소규모 기자회견이 많았고, 차량행진 방식도 있었다. 비 속에서 진행돼 참가자와 경찰 사이 큰 충돌 없이 대부분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다.

보수성향 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은 이날 오전 11시에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9명 이상의 집회는 못 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집회의 본질을 이해하지 않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집회금지 통고를 받아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서울행정법원은 집회 시간과 참여인원을 제한해 인용했고, 이에 자유대한호국단은 50분간 약 10명이 참석하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집회를 진행했다.

오상중 자유대한호국단은 "행정법원이 허가한 인원보다 적은 인원이 참석했다"며 "저희 회원도 참석하지 않

게 공지했다"고 전했다. 한 집회 참가자는 고(故)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장의 영결식에 시민 다수가 모인 것을 거론하며 정부 방역에 일관성이 없다고도 했다.

같은 시각 자유민주국민운동은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우리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이 직접 나서서 국민저항으로 맞서야 하는 현실에 직면했다"고 외쳤다.

문재인체포국민특검단은 이날 낮 12시에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을 파면하고 즉각 체포·구금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3·1절은 국민저항권을 발동한 뜻깊은 날"이라며 "우리는 오늘 국민저항권을 발동한다"고 말했다.

우리공화당도 이날 낮 12시에 탑골공원에서 기자회견을 열었고, 이후 한 국은행 양 등의 약 150개 거점에서 집회를 진행했다. 국본도 이날 오후 1시



계 명동에서 집회를 했다. 집회 및 기자회견은 각 9명 이내로 참여해서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비가 내리면서 경찰과의 큰 충돌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이 광화문 인근에서 진행하도록 제한적으로 허가한 자유대한호국단 집회 외 다른 1건의 집회는 진행되지 않았다.

이 집회의 집행정지 신청을 대리한 변호인은 자유대한호국단 집회에 참석해 "행정법원에서 허가받은 다른 한 곳의 집회는 법원의 부당한 조건 때문에 개최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법원은 코로나19 음성 판정서 등을 요구했는데, 이 조건이 부당하다

는 것이다. 소규모 차량행진도 진행됐다. 애국순찰팀은 오후 차량행진을 진행했다. 이 단체는 독립문 인근부터 동대문역을 왕복으로 오가겠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애국순찰팀의 차량 행진 집회를 허가했다. 승합차량 9대 이내, 오전 11시-오후 2시, 차량 내 1인 탑승, 창문 개방과 구호 금지, 경적 및 경로 이탈 제한 등의 조건이 붙었다.

국민대연합과 비상시국연대도 오후 각 읍지로와 세종문화회관 인근에서 출발하는 차량행진을 했다고 한다. **유유나기자**

신입사원 불러 뽀뽀 강요하고 추행 50대 간부 징역

자신의 관리·감독 아래에 있던 신입사원을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제조업체 간부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 박상현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혐의로 기소된 지역 모 제조업체 상무 A(58)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장은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과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장애인 복지시설에 각 2년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1시 30분께 자신의 사무실로 신입 여직원 B씨를 불러 '얼굴이 보고 싶어서 전화했다'며 B씨를 끌어안고 엉덩이·옆구리를 두드르거나 찔러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신의 입술을 내뺐다 '뽀뽀를 해달라'고 강요했고, 이를 거부하는 B씨를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씨는 업무 관계로 자신의 감독을 받는 피해자를 추행했다. 추행의 정도·방법,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은 점에 비춰 죄질이 나쁘다"고 지적했다.

다만 "A씨가 자백·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성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두루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재개발 시공사 금품 수수' 거짓 글 유포 60대 벌금형

재개발사업 조합 대의원 등이 건설사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내용의 허위 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부동산 개발업자 A(68)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 북구 모 재개발사업 관련 컨설팅을 했던 A씨는 2019년 11월 16일과 19일 재개발조합원들 646명이 참여한 사회관계망서비스 오픈 채팅방에 조합 대의원 2명과 공인중개사 3명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 명예를 훼손하고 공인중개사 사무소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피해자들이 재개발사업 시공사에 선정된 건설사로부터 고급 자동차를 받았다는 내용 등의 글을 게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들은 건설사로부터 금품·향응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재판장은 "A씨는 근거 없는 소문만 듣고, 진위를 확인하지 않고 이 사건 글을 게시했다. 명예훼손과 업무방해의 고의, 비방의 목적이 인정된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무면허 음주 뺑소니 운전자 바뀌친 사회복무요원 실형

무면허 음주운전 도중 뺑소니를 치고 여자친구가 운전한 것처럼 속이려 한 20대 사회복무요원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 9단독 김두희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무면허 운전)과 범인도피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무요원 A(24)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범인도피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A씨의 여자친구 B(21)씨에게는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28일 오전 1시 27분께 광주 서구 한 도로에서 7km가량 무면허 음주운전(혈중알코올농도 0.126%)을 하다 원동기 장치 자전거를 들이받아 C(26)씨를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음주·무면허 운전 사실을 은폐할 목적으로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교사한 혐의도 받았다.

B씨는 같은 날 A씨와 자리를 바꿔 운전석에 옮겨 앉은 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또는 교통조사관에게 '사고 당시 A씨는 뒷좌석에 누워 있었고 자신이 직접 운전했다'고 거짓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장은 "A씨는 집행유예 기간에 무면허 음주운전을 하다 인명사고를 내고 도주했다. 여자친구인 B씨가 운전한 것처럼 가장해 죄질이 나쁘다"며 A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뉴스**

"전남 모 여고 교감 상상초월 갑질 의혹, 철저히 감사"

학벌없는 사회 위한 시민모임 주장

도교육청 "갑질 여부, 민원인과 차이"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일 "최근 전남도교육청이 온갖 갑질과 부조리 의혹으로 신고된 전남 모 여고 교감에 대한 감사를 진행 중이다. 엄정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전남도교육청으로부터 받은 민원 답변서 등에 따르면 해당 교감이 저지른 갑질 사례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모임은 "해당 교감은 A교사에게 사적인 용무(자녀 선거 관련·결혼식 참석 등)로 A교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도록 지시하는가 하면 수

업 중인 A교사에게 부당한 업무(창문 테이프 제거 등)를 지시하고 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른바 미운털이 박힌 과학담당 B교사의 과학실 사용(수업 이외 교구준비·교재연구 등)을 제한하고, 또 다른 교직원에게 B교사를 감시하도록 지시했다"고 덧붙였다.

시민모임은 "교사 부모의 외모를 비하하는가 하면 여교사를 성추행하고, 코로나19 자가격리 대상이 아님에도 허위 보고 뒤 연가 신청을 한 의혹들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시민모임은 "교감은 봉건적인 권

력을 휘두르는 자리가 아니라 민주적인 학교 운영을 통해 교직 전문가들의 집단지성이 발휘되도록 조율하는 직책이다"며 "교감은 교직원 이 재능과 열정을 발휘하도록 지원하고, 학생 교육을 최전선에서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학교 교감의 횡포에 휘둘린 교직원들은 단지 마음에 상처를 입는 데 그치지 않고 스트레스, 자존감 저하, 자진 퇴사(예정)에 이르는 등 학교 교육력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해당 교감을 철저히 감사해 학교 현장에서 갑질을 뿌리 뽑겠다는 전남교육청의 강한 의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며 "해당 교감은 과오를 깊이 반성하고, 학교구성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시민모임은 "전남도교육청이 솜방망이 징계 처분을 하거나 학교 측이 내부고발자를 위협하는 행태를 저지른다면 더 엄중한 책임이 되돌아갈 것임을 경고한다"고 말했다.

앞서 도교육청은 민원인의 이 같은 민원제기에 대해 "학교를 방문해 교감 등 관계자를 대상으로 각 사안을 조사했다. 수업시간 중 학년실 유리창 테이프 제거, 교직원 차량 사적 사용 등 일부 인정된 사실도 있지만 인정하지 않은 사안들도 있다. 갑질 여부에 대해서도 민원인과 차이가 있다"고 답했다.

도교육청은 "이 같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관실에 감사를 의뢰한 상태이다"고 설명했다. **김정환기자**

서버구축 및 운영
홈페이지 제작, 인터넷신문, 쇼핑몰 제작

준솔루션
문의 : junsol@junsol.com